

한다. 3년 동안 병역특례복무를 마친 사람 중에는 나중에 불법 파견업무가 발각돼 다시 군에 입대한 경우도 있다.“

○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장치 부재

- 병역특례자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그러나 소송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되는데, 실제 복직 관련 심의가 진행된다면, 지역 노동위원회에서 3-4개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5-6개월, 즉 대략 1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봐야함. 물론 1년여의 기간동안 징집은 당하지 않으나, 많은 병역특례자들이 해당 1년간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신분상으로도 불안한 기간이 된다는 점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것이 사실임. 또한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야 그나마 다행이지만 패소할 경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이후 구제 - 복직과 병역

※ 이후 구체적인 조사를 위한 초벌보고서임. 인터뷰에는 멀티데이터시스템 노동조합, 병역특례로 대체복무를 진행한 시민 1인이 응해주었음. 참고자료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병무청(2001.02), 「병역특례 근로자 “차라리 군대가겠다”」 「시사저널 (95.5.4)임

○ 대체 대체역

i) (1차추천) : 병역 / 대체역

ii) 2 " : 전문직종

지급: 전문직종 병역도 / 대체역도 (호의병상 병역특례지급 어느 버전까지?).

한국의 병역, 군사제도변혁에 희망이 있다!

군의 자주화와 민주화의 긴 여정을 중심으로

김삼석 (군사문제연구가, hiarmy@orgio.net)

이솝우화 - 목마른 사자와 멧돼지

더운 여름날 목마른 사자와 멧돼지가 작은 샘터로 왔다.

그러나 누가 먼저 물을 마시느냐 하는 것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은 어느 한 쪽이 죽어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둘은 마지막 결전을 위하여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독수리들과 까마귀들이 몰려와 그들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을 본 사자와 멧돼지는 싸움을 멈추고 "우리들은 독수리 떼나 까마귀의 먹이가 되기보다 차라리 친구가 되는 것이 좋겠어!"라고 말하였다. 작은 샘터는 휴전선을 사이에 군사분계선이다.

이제 젊은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이 무너지고 있다. 독수리 떼나 까마귀 떼가 서서히 몰려가고 남북의 멧돼지와 사자가 친구가 될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대가 가히 혁명적으로 바꾸었다. 이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10.12일 북미공동성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분단과 전쟁으로 얼어붙은 지난날을 한꺼번에 녹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징병제를 필두로 비로소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한반도 군사구조의 변혁의 과정을 군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군의문사를 비롯한 군인들의 자주적인 인권문제가 있다.

"집이 부산인데 아들 놈이 강원도 첩첩 산골에서 총으로 자살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 처참하더라구요. 하늘이 무너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부대 측이 무조건 자살이라고 하면서 빨리 화장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자살을 믿을 수 없어 죽은 현장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봐야 뭐하냐'며 보여주지 않고, 그럼 같이 근무한 소대원이라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 안 된다고 하면서 어서 자식이나 데리고 가라는데...

그래, 어쩔 수 없이 화장터로 가려했지만 부대 쪽에서 시신을 신고 나올 차도 내주지 않더라구요. 어찌 어찌해서 관광버스를 불러 그놈을 신고 나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나는 관광버스를 불러 자식을 데리고 나왔지만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데리고 올까 생각하니 이 나라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전국 군 폭력 희생자유족협회에 접수된 180여건(2001년 2월 말 현재)의 군의문사, 군 폭력 희생자 사건은 줄어들 줄 모른다.

한 해에 577명의 꽃다운 젊음이 피다만 채 꺾이는 것은 일제의 내무반 규율과 미국식 군사제도인 기만적인 병역제도가 뒤섞인 폐쇄적인 권위주의의 악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52년 동안 쌓여온 뿌리뽑히지 않은 악습이 군대 곳곳에 남아 있다 보니 그 유족들은 오죽하면 '이건 우리 군대가 아니여'라고 한다.

또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최근 부대 안에서 정훈교육 교재로 쓰고 있는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라는 조그마한 녹색수첩을 살펴보자. 모두 12가지 항목으로 80쪽 정도가 된다.

1. 세계는 불타고 있다.
2. 북괴의 전쟁 도발 위협
3. 북괴의 위장 평화 공세와 대남 도발
4. 실패한 체제, 신음하는 북한 주민

5.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북 포용정책
6. 북괴군은 우리의 주적, 싸워 이길 수 있다.
7. 주한미군은 왜 필요한가?
8. 통일의 참다운 뜻은 ?
9.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10. 좌경용공세력의 실체와 위협성
11. 민족 수난의 역사와 국방의무
12. 민주시민의 책임과 의무

이들 교재는 비디오로도 만들어져 대대급은 물론 중대까지 비치되어 있다. 정훈교육의 핵심은 책이나 비디오의 내용을 얼마나 암기하고 있는가에 맞춰진다. 따라서 사병들에게 매주 바뀌는 주제별 교육내용을 달달 외우게 한다. 급기야 서로 경쟁하듯 암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우방은 누구인가, 남북한 전력비교 등을 주입시키고 늘 우리 군은 우세하다고 교육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할 이유로 전시에 미군이 예비탄 70%를 대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도 등장하는 것이 한국군대의 교육현장이다.

군 의문사를 막는 방법은

52살 먹은 한국군대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사병들의 아름다운 꽃이 피다 말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군의문사라도 막아내야 한다. 그래서 먼저 부대 안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군의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한편에서는 일부군대에서 구타 없는 분위기를 만든 선임병들의 전통을 잘 이어 나가야 한다. 자기가 선임병이 되었을 때 구타근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 그래도 구타가 있을 때는 바로 신고하고 구타자의 징계와 타부대의 전출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휘관에게 구타근절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을 대비해 주변의 동료사병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많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뒷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 사람의 증언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료사병은 현장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유족들과 면담할 때 언제든지 양심적인 증언을 하도록 한다. 부대 안에서 양심적인 증언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군인들도 포함되어야) 시급하다. 휴가 때 군 폭력의 상황이나 인권침해사례를 인권단체, 신문사, PC통신, 인터넷에 제보하고 폭 상황의 시작과 끝을 육하원칙에 따라 잘 정리하는 습관을 갖자.

한편 인권단체들과 유족은 군내 사망 사고만큼은 민·군 합동의 독립적인 제3의 기구가 수사하는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또 현재 논의되는 국가인권위원회보다도 특별조사권을 가진 시민단체와 국회로 이루어진 강력한 인권위원회가 그 대안의 하나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망사고 진상특별법'을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에서는 제일먼저 군 사망사고가 날 경우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뒤 사단장은 사고 즉시 지역구 국회의원에 알려 국회진상조사단이 즉각적으로 사고현장을 방문하도록 해 현장조사와 사고원인, 증인조사를 충분히 해 유가족이 사인을 납득하고 동의할 경우 장례를 치른다.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명예회복, 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희망의 군대를 향한 몸짓

거대한 공룡 한국군대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10.12일 북미공동성명에 이은 머지 않은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민족이 자기민족의 문제로 대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쾌거였다. 신문 1면 머릿기사엔 '이제 전

쟁은 없다.'라는 아기 손바닥만한 만한 크기의 글씨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다. 남한의 군통수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주적'인 인민군 육해공군의 사열을 받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서로 힘껏 겨앉은 사건으로 남한 사회전체는 충격에 빠졌다. 55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제일 충격에 빠진 곳은 국방부였다. 주적이 혼란에 빠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렇스록 국방부는 한민족 차원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을 두 번 세 번 잘 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평화롭게 공존 공영하자는 분위기와 공동선언에 대한 전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과감하게 '주적개념'을 없애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족인 북한의 한 병사는 이제 '한 마리'가 아니고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 자식을 군에 보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는 병역의 의무라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시기이다. 누구보다 군대의 변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과 남한이 북한과 정치·군사적으로 적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사병들에게 "북괴군은 우리의 주적, 싸워 이길 수 있다."며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한 한국군대의 징병제도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

한국군대의 징병제도의 반통일적인, 반민주적인 폭력성이 군의문사와 군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지금도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군대의 징병제도는 단순한 병역문제가 아니다.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는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와 함께 하는 정치·군사적인 핵심문제로 평화통일로 가는 길 한가운데서 중요한 군축문제중의 군축문제다. 병역감축과 무력감축, 국방비감축과 함께 우리사회를 민주적으로 개조하며 모든 부분을 정상적으로, 제자리로 돌리는 중요하면서도 평범한 주장이다. 그 노력의 한가운데 있었던 군인들을 살펴보자.

1980년도부터 살펴 본 사병과 장교들의 자기권리 찾기 운동

한국의 군사제도를 민주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양심적인 사병장교들의 몫이다. 양심적인 사병장교들의 20년간의 자기권리 찾기 운동은 가시밭길이었다. 양심적인 군인들은 80년대 들어 하나, 둘 감옥으로 향한다.

먼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아람회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으로 황보윤식 공군대위, 김 난수 육군대위가 감옥으로 향한다. 아람회의 '아람'은 김 대위의 딸 이름이며 당시 검찰이 아람이의 백일 잔치에 참가한 동료, 선후배, 이웃 모두를 '반국가단체 구성원'들로 둔갑시킨 웃지 못할 사건이다.

97년 5월 18일 살림터 출판사에서 나온 정치범 명예회복협의회회의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책을 참고해보자.

“내가 강원도 최전방 GOP근무 설 때 어느 날 밤 철책선을 따라 경계순찰 중 나는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다가 문득 '운동주의 별'을 발견했다네. '조그만 땅덩어리, 그나마 분단된 조국, 같은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며 ...정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렇다.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 저 광활한 만주벌판 끝 하늘밑에서 근무하며 참다운 군인의 길을 걸으리라'는 굳은 맹세를 하였지.”

김 난수대위(ROTC 15기)! 73년 소위에 임관한 뒤 서울 근교 사단에서 소대장으로 근무를 시작해 중위로 진급해서 강원도 최전방 GOP근무 중에 참다운 군인의 길을 걸으리라 맹세했다. 그러나 1981년 8월 27일, 5공 초기 대표적인 반국가단체조직 사건인 아람회 사건으로 구속된다. 그는 몇 년 동안 감옥 안에서 쇠창살사이로 '운동주의 별'을 보아야 했다.

공군대위 황보 윤식! 그는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편지로 긴급조치 9호에 걸려 옥고를 치르다 79년 10·26사태 뒤 석방되었지만 81년 7월 16일, 같은 아람회 사건으로 구속된다. 당시는 대전 공교 교사였다. 83년 12월 23일, 2년 5개월 동안의 투옥생활을 마치고 '형집행정지'로 성탄특사로 출소. 현재 인천생활협동조합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직도 이 나라는 아람회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진실은 계속된다. 사병에게도 한국판 드레퓌스는 계속된다. 계속되는 의문사건과 함께 5공화국 당시 군대 안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자주적인 움직임이 우발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을 서서히 이겨내면서 일기 시작했다.

1982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고등 군법회의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이태곤, 최태식 상병은 '진실의 아들'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1982년 11월 27일 민주구국투쟁 선언문이라는 유인물 60매를 제작하여 소속부대 화장실에 부착하였다는 죄목이었다. 최씨는 재판에서 "사병의 현실인식과 인간성 회복을 위해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다"고 진술한다.

장교, 사병들의 양심선언운동

폐쇄된 군의 울타리에서 양심선언을 한다는 것은 일단 용기가 필요하다.

당시의 양심선언 사병들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세대사병인 셈이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군인이었을 뿐이다. 다만 다른 사람보다 더 가슴이 뜨겁게 반인간적인 군사제도의 변화를 바랬고 나라와 군대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가슴아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온 몸을 던진다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당시 그들이 남긴 발자국은 지금 뒷사람의 길이 되고 있다.

광주에서 전두환의 계엄군에 총부리를 들이댄 김 병장의 거사가 있었다면 서울에선 방위병 김종태 이병이 있었다! 군대를 둘러싼 객관적 조건이 80년 광주민중항쟁의 좌절과 함께 푹푹 얼어붙었다. 서울에는 80년 6월 9일 계엄군이 거리거리마다 살벌하게 눈알을 부라리는 죽음의 지대 속에서 군사정권의 노골적인 집권욕모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한줄기 불빛이 타올랐다. 군사정권에 온몸을 불사라 항거하는 노동자 출신 방위병 김종태³⁾이었다. 불꽃으로 80년대 변혁운동의 물꼬를 죽음으로써 터놓은 국방노동열사였다.

김 병장과 김종태의 죽음을 넘어 87년부터 시작되는 군인·전경들의 양심선언은 저항을 포기하고 불의와 타협할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사람의 입장을 지키면서 반민주적, 반인간적 군대질서의 민주적 개조에 초석이 되고 있다. 1987년 이후는 자주를 노래하고, 민주를 춤추며, 통일에 생명을 거는 위대한 전통을 마음속에 간직한 이 땅의 청년·학생들이 기나긴 단절의 역사를 닫고 군대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시작했음이 이어지는 양심선언들을 통해 확인된 해였다.

〈표11〉 군인양심선언일지⁴⁾

연월	지역	주요내용
1987. 12	서울	방위병 김종태의 죽음
1988. 1	서울	군인양심선언
1988. 2	서울	군인양심선언
1988. 3	서울	군인양심선언
1988. 4	서울	군인양심선언
1988. 5	서울	군인양심선언
1988. 6	서울	군인양심선언
1988. 7	서울	군인양심선언
1988. 8	서울	군인양심선언
1988. 9	서울	군인양심선언
1988. 10	서울	군인양심선언
1988. 11	서울	군인양심선언
1988. 12	서울	군인양심선언

양심선언 사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군대 내부에서 일어난다. 둘째는 군대 외부에서 일어난다. 셋째는 군대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넷째는 군대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다섯째는 군대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여섯째는 군대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일곱째는 군대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여덟째는 군대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아홉째는 군대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열째는 군대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3) 박래군, 「죽은자와 산자의 대화」, 「연세」 지 30집, 1990 겨울, 연세대학교 266쪽
 4)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90인권주간 자료집」

계급	성명	소속	사건개요	현상태
중령	임택준	육군본부	88.7.7 대통령에게 군의 인간화와 민주화를 위한 31개항의 고발문 제출, 군인권의 무법자를 고발	
대 위 중 위 중 위 소 위 소 위	이동균 김종대 이청록 박동석 원균경	30사단 중대장 30사단 소대장 " " 30사단 공사장교	89. 1. 5 한국 기독교회협의회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명예선언을 하고 이후 구속	기소유예로 석방되어 불명예 제대로 전역
일병	정광민	수방사 헌병단	88. 6. 8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연세 대학생회관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수배중. 민주군대쟁취투쟁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구속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등으로 4년을 선고받고 복역 뒤 출소
일병	박길남	보병 제35사단	88. 1. 7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군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민주군대쟁취투쟁위에서 활동 중 구속	복역 뒤 출소
일병	김상철	공군 제1전투비행단	88. 11. 18 한교협 인권위에서 군의 비리 폭력 등을 척결하자고 주장 후 민주군대쟁취 투쟁위원회에서 활동 중 구속	
일병	서영완	보병 제28사단	89. 4. 17 한교협 인권위에서 군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양심선언 후 민주군대쟁취투쟁위원회에서 활동중 구속	복역 뒤 출소
이병	장문걸	공군본부 (방위병)	89. 6. 3 전대협에서 군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군의 비리와 폭력을 폭로하는 양심선언	
이병	류범희	보병 제32사단 (방위병)	전대협에서 양심선언	
상병	서준섭	군수사령부	90. 7. 27 전대협에서 국군조직법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10만 이하로 병력 감축 등을 주장하며 양심선언	
이병	윤석양	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프락치 활동 등을 강요받고 90년 10월 4일 한교협에서 인권위에서 양심선언	복역 뒤 출소, 결혼
중령	손대희	육군 사단대대장	9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보름 앞두고 이회창후보 아들의 병역기피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사퇴촉구 양심선언	근무지 무단이탈 및 정치관여금 지위반으로 1년 형을 선고. 98.10. 1 일 가석방으로 풀려나

양심선언 사례에는 아래 양영진 열사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울부짖는 경우도 있고, 수배생활과 고문, 투옥을 각오하고 근무지를 이탈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시행하는 동안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혹은 감옥을 각오하고 국민들에게, 전우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을 그토록 뜨겁게 말하려 했는지 생생히 알아보자.

이 시기 87-89년도에 방위병들의 정치적 자살과 군대내 민주화투쟁의 바람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국군인, 방위병들의 조국통일과 군자주화,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알 수 있다.

양영진 이병을 기억하는 사람은 장재완 일병을 잊을 수 없다. 양영진·장재완 추모사업회가 부산에 있다. 방위병 장 일병(부산대)도 지금은 고인이 되었다. 그는 87년 3월 27일 부산의 가까운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다. 방위복부

중 버스에서 잃어버린 가방(조직에 관한 자료, 문건이 들어있었음)이 보안대로 넘어가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죽을 때까지 조직보안에 관한 유서를 남겼다. 그러나 한달 후인 10월 10일에는 양 영진 이병(당시 22세)의 투신자살을 접해야 하는 비통함이 있었다. 지리산 오른편에서 태어난 '문학청년' 양 이병은 어머니를 애뜻하게 그리며 시를 많이 썼다. '어머니의 손톱'은 대표적인 시다.

꽃처럼 몸을 던진 양영진 이병

1988년 조국순례 대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 다니던 양영진 이병은 8월 8일 입영통지서를 받고 8월 10일 입대하였다. 하지만 그 해 10월 10일 부산대 공대 건물에서 스물 두 살의 나이로 몸을 던졌다.

“저의 충구는 언제나 북한 동포, 그리고 남한 민중 구체적으로는 어머니, 형님, 그리고 동지들에게 겨냥되어져야 했습니다. 이 반역의 충구, 패륜의 충구에 의해 저는 가슴에 무수한 총알을 맞으면서 어머니의 편안한 미소 같은 아침 햇살이 퍼져오기를 발길 돌우어 기다렸습니다. 매일 새벽은 찾아오지만 허한 얼굴로 쓰러지는 그리움만 MI6소총의 섬뜩한 느낌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자주 인내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이라도 참고 견디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인내심의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일방적 복종심의 습성을 배양하여 기계적인 현실 체념주의형으로 만들고, 인간이 인간을 확대하고 억압하는 정권에 가장 잘 순응하는 인간형으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현 사회 내에서 민중의 자주성이 유린당하지 않는 곳이 없었지만 군대는 가장 구조적으로 인간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군대조직 해체하라!....

통일염원 44년 10월 9일 양영진 드림“

그의 죽음은 일제 군국주의 잔재물로 태어나 온갖 비리, 구타, 가혹행위가 횡행하며 수많은 의문사로 얼룩 지워진 군대, 미래를 짊어질 엔 세대 사병들의 건강한 의식을 마비시키는 군대, 온 겨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군 지휘관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한국군대에 대한 일대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군대 현실을 바로잡아 달라라는 군대 바로 세우기에 대한 책임을 살아남은 자들에게 온 몸으로 말했던 것이다.

그 뒤 차례로 88년 11월 공군의 김상철 일병, 89년 1월, 4월, 6월의 박길남, 서영완 일병, 장문걸 이병 등이 거대한 군의 부정부패, 비리, 폭력 등을 폭로하면서 민족의 군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전투 경찰 내에서도 불꽃 터지는 군인들의 양심선언 못지 않게 시위진압 거부와 전경해체를 주장하는 그들의 양심선언이 줄을 이었다. 89년 1월과 6월 사이에 조규봉 이경, 임성호, 유진태, 이하일 일경, 유성호 수경 등 백골단 6명의 집단 양심선언 등이 그것이다. 이같이 89년 상반기는 가히 폭발적인 군경 양심선언(군인 8명, 전·의경 10명)으로 군대와 경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들의 뜨거운 의지를 국민들과 전우들에게 보냈다.

다른 한편으로 88년도에 접어들어서는 군민주화투쟁 바람이 폭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어났다. 88년 4월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지계군」 5이라는 유인물에서는 사병들의 민족의식을 통한 의식화, 조직화작업의 촉구와 방위병들의 경우 각 지역에서 지역운동과 함께 군을 민족의 군대로 그리고 국민의 편으로 돌려세워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었다.

너희가 '전우의 함성'을 아느냐?

5) 자세한 내용은 전교학신문 91년 1월 16일자 「급진좌경세력의 군경침투활동과 대책」 참조

그해 9월에는 현역 군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매국군인 몰아내고 민주군대 이룩하자”는 내용의 ‘전우의 함성’⁶⁾이라는 유인물이 군부대가 밀집한 의정부에 대거 뿌려진 것이 발견되어 군의 자주화,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9월 6일 오후 8시경 의정부 터미널 부근에서 발견된 이 유인물에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총정훈련거부 *동족을 학살하고 정권을 강탈한 매국군인 처단 *분단체제 강요하는 미국축출 *군사대결 조장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거부 등의 주장이 담겨있었다.

이 같은 유인물이 대량 뿌려진 것이 확인되자 의정부의 경기 북부 민통련 관계자들은 “오래 전부터 사병을 중심으로 군대 안에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 있어온 것으로 알고있다”며 앞으로 군의 민주화를 위한 이 같은 운동이 퍼질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양심선언의 형태는 대중과 함께 하는 운동이기보다는 소수의 선도적인, 일회적인 운동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것은 양심적인 애국군인들이 군민주화와 사회민주화투쟁에 참여하는 하나의 형태로서 중요한 뜻이 있겠다. 또 다른 하나는 88년도부터는 군 입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싹트면서 ‘군과 병역문제’를 다시 보자는 바람이 불기도하였던 것이다. 그 흐름으로 전국적인 청년학생들의 각급 교지와 단행본 등에서 군 입대에 대한 문제제기, 제대자들의 군 생활체험 등을 위주로 한 논문 20편 정도가 실려진 시기가 바로 이때이며 이들 논문에서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사병들과 함께 술선수범과 진실한 사랑으로 실천하는 군대로 바로 보기 시작했다. 청년의 황금기를 썩어 돌아오는 허송세월의 3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군대의 아픈 곳을 고쳐나가는 군복무기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눈을 강조하고 있다. 이 흐름은 이후 90년대 일부 단위에서의 병영학교와 전국적인 강제징집철폐투쟁, 예비역학생들의 자주적인 예비군 훈련, 민방위훈련 개혁투쟁으로 드러난다.

중령의 양심선언과 89년 군 명예선언, 그리고 윤석양

중령이면 사병들의 할아버지 할아버지뻘이다. 왜 그런 위치에 있는 군인이 양심선언을 했을까.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 역사의 한 부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대통령께 고발.... 군대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일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오히려 은폐 조작하는데 만 급급, 만일 이러한 군 현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역사의 독버섯이 순식간에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되고 말 것입니다.” (임택준 중령 양심선언문 중에서)

88년 7월 7일 육군 본부에서 근무하던 육사(32기)출신 임택준 중령은 대통령에게 군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한 31개항의 고발문⁷⁾을 제출하면서 군 인권의 무법자들을 고발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는 이후 군 생활 17년을 타의에 의해서 마감하였지만 많은 후배 장교들과 육사 선배들의 위로와 지지 속에서 양심선언 출신 고급장교로서 군민주화를 향한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다.

89년 1월 5일 모진 탄압을 눈앞에 두고 군의 부당한 정치간섭과 불의에 대한 맹종을 단호히 거부한 이동균 대위 등 5명의 초급장교들의 군 명예선언 발표는 우리에게 철옹성으로 보여졌던 군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기에 충분하였고 이것은 사병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임택준 중령의 양심선언과 함께 장교들까지도 군민주화운동에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들은 ‘군 명예선언문’에서 군을 불명예로 이끌어난 정치군인들의 반성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면서 군이 국민의 군대로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나 육군본부는 1월 9일 이들을 군형법상의 명령위반 및 정치참여 금지조항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그 후 이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전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다음 이동균 대위와 김종대 중위는 파면하고 나머지 장교들은 3개월

6) 「민중의 소리」 1988. 9. 30 일자 6면 참조,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7) 자세한 내용은 말지 91. 3월호, 184-187쪽 참조

간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애국적 군인들에게 새겨진, 장엄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군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강한 용기와 신념은 군 당국의 고도의 탄압(두 장교의 불명예 제대, 김종대 중위에 대한 89년 3월 16일의 노상 테러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많은 군인·전경들이 집단적이고 대담하게 군대를 바로 세우는 대열에 속속 동참하게끔 하였다.

군대와 경찰을 바로 세우려는 양심선언은 이어진다.

89년 5월 8일, 부산 동의대 사태 진압에 나섰던 황원진 수경을 비롯한 6명의 '무시무시한' 백골단들이 평민당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동의대 사태 진상규명과 경찰의 중립화를 요구하였을 때 재야 단체와 대학가 등에서의 연대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하여 갔다. 그러나 한달 후 89년 6월 8일 경찰민주화와 전경해체라는 민주적 지향과 요구를 앞장서서 실천해오던 전경해체투쟁위원회의 노재학 상경이, 9일에는 연성흠 일경이 각각 연행되었으며 7월 31일에는 양승균 일경도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잡혀 구속되었다. 이후 90년 12월 14일, 18일에 연성흠, 노재학 씨는 1년 6개월 복역 후 출소하였고 양승균 씨는 91년 4월 출소하였다. 양 씨는 87년 1월 8일 전경 사상 최초로 양심선언을 산 증인이다.

양심적인 장교와 사병에 이은 백골단 6명의 집단적 양심선언은 전경, 백골단조직 자체 내에서 집단적 운동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였으며 구타로 날이 새는 전경내부의 비인간화를 거부하는 자주적, 양심적 인간으로 거듭난 것이었다. 89년 3월 2일의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의경 80여명, 9월 1일 인천시경 소속 의경 1백30여명이 집단적으로 '시위진압 동원 반대와 인격적 대우'등을 요구하며 가두로 진출한 것 등에서 전경들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하는 대담한 행동을 보여 주었다.

90년 가을 한 보안사(현 기무사) 이병이 국방부장관을 물러가게 한 사건이 터진다. 이름하여 '윤석양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사건'이었다. 윤 이병도 신세대사병이었던 모양이다. 보안사를 탈출할 때 '디스켓'에 민간인사찰자료를 담아 나와 보안사를 두 손들게 했다.

90년 가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군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활동과 고도화된 녹화사업!

양심적인 군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정치보복적인 탄압은 "기무사의 대국민 사찰, 강제징집⇒사병들에 대한 기무사의 기초조사 감시통제, 녹화사업, 프락치 강요⇒의문사, 군과 관련한 각종 조직사건의 조작, 수많은 녹색인간(프락치)의 창출"이라는 일련의 탄압 순환장치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91년 벽두부터 기무사와 경찰정보기구의 사찰활동, 폭력적 탄압의 휘파람은 그 진가를 발휘하여 2월의 외대생 남현진 이병, 서울대생 송중호 일병의 의문사사건, 4월 15일의 최홍기 이병의 녹화사업폭로 양심선언 등으로 나타나 기무사의 정치보복적 탄압은 쉴 틈이 없었다.

그러나 기무사의 이 순환장치에 반대해 군의 민주화를 원하는 세력들과 청년학생들은 기무사의 불법사찰과 의문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애국군인과 군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을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91년도에는 6공식 강제징집을 거부하면서, 모순 투성이인 병역법과 노동악법을 개폐하려는 방위산업체 해고노동자와 강제징집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병역제도개선 요구로 펼쳐 일어났다. 그리고 89년 상반기의 집중적인 양심선언보다도 더욱 집중된 양심선언이 전개되는 91년 4~5월에는 강경대 열사사건을 계기로 민중들의 자주화, 민주화투쟁이 꽃피는 시점에서 같이 공동걸음을 걸어가는 성숙함을 보인다.

양심적인 군인들을 지원하며

불법조직 백골단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강경대열사 사건 이후 범국민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자 공안 당국은 선도적 학생운동과 군사투쟁활동을 빌미삼아 91년 6월 서울대 '민족해방활동가 조직'사건으로 52사단 김용명 이병의 4명, 청주대 '자주대오'사건으로, 화천 27사단의 권영환 병장의 4명,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연구원 구속사건'(이하 서사련)으로 단기병 이창희외 3명 등 다종다양한 군 조직사건을 전국적으로 만들

어 나왔다.

군 당국의 발표를 요약하면 '민족해방활동가조직'사건⁸⁾에서는 이들이 "현역사병으로 군복무 중인데도 불구하고 일과 뒤 군대내의 동료들 대상으로 사상지도 등의 적극적인 군부투쟁활동을 획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청주대 자주대오'사건에서는 '학군연계를 통해 대통령 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동료사병들에게 주체사상을 선전하거나 반미 이적활동을 해왔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또 서.사.련 사건은 그 누가 보더라도 군 당국의 무리수로서 이미 군입대 전에 합법적으로 출판된 도서를 문제삼아, 학문과 사상의 자유까지 짓밟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악용한 수사기관들에 의해 제대 2, 3일을 앞두고 구속되었던 것이며, 자주대오사건의 고성 의 25사단 송재봉 이병의 경우는 입대하자마자 아무런 혐의도 없이 기무사에 의해 구속되는 등 기무사의 불법연행, 고문, 구금 등 불법적 정치공작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것은 한마디로 군 수사기관이 민족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시기 때마다 병역의 의무를 제물로 삼아 조직사건을 만들어 내, 90년 이후 군의 정치적 개입을 일상적인 위협수단으로 교묘히 활용해왔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도 예외가 아니다.

전경 전경, 의경도 주인으로 떨쳐 일어난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90년대는 군대와 준군사조직인 전경·의경사회에서도 예외 없이 일어났다.

90년 들어 3월 20일 종로서 소속 의경 15명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반발하여 집단적으로 부대를 이탈하였고, 6월 2일에는 부산시경 소속 전경 2백 여명이 부대해체 후 타 근무지 배치에 반발, 강력 항의하는 등 대중적 운동은 끊임 줄 몰랐다.

90년 10월 윤석양 사건을 계기로 90년대 군민주화 지원운동의 구심으로 등장한 윤석양 후원사업회(90년 12월 준비위원회 발족)는 양심선언 군인·경찰 출신자들과 그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진영과의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해체 기무사!, 쟁취 군민주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각종 군 조직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족들의 범정부투쟁을 지원하고, 91년 4월 강경대 열사 사건 이후의 폭발적인 양심선언투쟁을 교훈으로 군민주화 홍보매체와 소식지로서 「군에 의한 민주화 운동 탄압 실태」, 「군경인권소식」 지를 처음 발간하게 된다.(91년 7월 첫 회 이후 매월 1회 발간)뿐만 아니라 각종 군경의문사의 진상규명과 군경양심수석방투쟁, 강제징집 철폐투쟁 등을 지원하는 등 군자주화, 민주화운동을 필요로 하는 대중들과 온 몸으로 하나가 되어 군자주화, 민주화운동의 일대 모범을 만든다.

예비역 대학생,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또 예비역들도 구경 만하고 있지는 않았다. 어제의 용사들이 나섰다. 길을 비켜라. 당시 예비역들은 도서관에서 고시준비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86-87년 문무대. 전방입소 철폐투쟁을 교훈 삼아 90년부터 불기 시작한 자주적인 예비군훈련 쟁취투쟁과 그 해 10월 42주년 국군의 날을 주체적으로 맞이하고자 했다.

전국적인 예비역 복학생들의 군의 자주화, 민주화, 비핵군축을 위한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성과로 91년 4월 연세대에서 「병영학교」가 최초로 열렸다. 이를 모범으로 경희대 수원캠퍼스, 조선대, 전북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예비역 복학생협의회(만우리)가 주축이 되어 군입대자들에 대한 군에 대한 올바른 소개와 병역법안내, 모범적인 병영생활 등을 제시하였다. 91년 2~3월 남현진 이병과 송종호 이병의 의문사사건을 계기로 전국대학생기자연합에서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군민주화를 위한 공동기자단」 구성을 통해 공동취재활동을 했다. '군대 죽으로 가는 곳입니까?'라는 기획광고와 '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공동취재기사가 연재되기 시작했다. 이는 인권현실과 함께 '청년과 병역문제'가 이제 청년학생 모두의 공동의 문제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했다.

당시 눈길을 끄는 것은 90년 7월 17일 군수사령부 탄약사령부 서준섭 이병이 양심선언을 했다. 그 내용은 국군조

8) 자료집 「군에 의한 민주화운동 탄압 실태」, 민가협, 윤석양후원사업회의 3개 단체 발행

직법폐기,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수, 평화협정체결, 남북군사력의 10만 이하로의 감축, 가혹한 군사훈련과 사고로 사망한 모든 군경들에게 보상비 지급을 요구했다. 또 91년 8월 대구대 손석용 이병의 살신성인이 있었다. 그는 자기 학교 4층 옥상에서 분신투신자살을 하면서 '조국통일, 미국의 용병이 되어 동포의 가슴에 더 이상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 라는 유서 남기면서 산화해 갔다. 이를 계기로 애국군인들의 군자주화, 민주화투쟁과 청년학생들의 비핵 평화군 축 투쟁이 접목되면서 한반도의 전쟁위험과 과도한 군사력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애국군인들의 절규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양심적인 군인들이 바로 비핵평화 군축운동의 한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줌으로써 비핵평화 군축운동은 군의 자주화, 민주화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윤석양 후원사업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양심선언 군경 지원대책위원회로 새로 태어났다. 강경대 열사 사건당시 군경의 양심선언은 물밑 듯 터져 나왔다. 전·의경들인 박석진, 김대영 군인들인 이동익, 고대성 일병이 군대와 경찰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부대를 나와 오랫동안 쫓기는 몸이 되었다. 양심선언 군경 지원대책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기독교회관에서 기나 긴 농성을 정리하며 그들은 군복대신 수의를 입어야 했다. 93년 7~9월경에 그들은 감옥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90년대를 여는 이지문 중위 사건과 군인들의 단결

...아침 조간신문에 실린/ 한 젊은 장교의/ 양심선언 내용은 / 공개투표를 하였고/ 특정후보 찍기를 강요받았다는/ 그리고 개표 후 결과를/ 해당 부대 지휘관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려 했다는.../ 같은 날짜 국방일보에는/ 외부에서 불은 사주를 받아/ 근무지를 이탈한/ 젊은 장교의/ 탈영사고 기사가 / 실려 있었다

편해문의 시 '양심선언'의 일부이다. 92년 5월! 군인의 권리 찾기가 시작되었다.

92년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두고 군 부재자투표 부정을 폭로한 육군 제9사단 이지문 중위의 용기있는 양심선언을 시작으로 우리군의 역사상 최초로 광범위한 애국장교, 사병들이 스스로 주인으로 떨쳐 일어났다.

그것은 군 부재자투표 부정폭로로 나타나 사병과 장교들의 인격과 정치적 제 권리를 보장하라는 한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폐쇄된 군대의 서신검열과 소지품검사의 벽을 허물면서, 누구는 애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익명의 전화로, 생생한 병영일기로, 신문 제보로, 면회장소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군 부재자투표 부정폭로를 펼쳐내는 등 대중운동의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며 90년대 군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

그것은 9사단뿐만 아니라 1사단, 5사단, 7사단, 12사단, 26사단, 30사단, 52사단, 57사단, 60사단, 수도방위사령부, 2군사령부 수송연대, 3군사령부 예하부대, 육군통신사령부, 육군기술병과학교, 공군3579부대, 해병2사단 등 육·해·공군 전군에서 거대한 물줄기로 흘렀다. 애국군인들은 시민으로서의 기본권리를 지키고자 선거부정과 무법행위가 횡행하는 '병영'에서 그들의 요구를 부르짖으며 민족군대, 국민의 군대를 향해 자기 몫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관급, 장성급 예비역 장교들이 군 부재자투표 선거개입을 몸으로 실천한 국군기무사에 대해 그 기능과 임무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글인 「누가 군을 옥되게 하는가」 등을 한겨레신문9)에 투고하는가 하면 이 중위의 용기 있는 행동에 "땀땀한 일 했다"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은 상급장교 등 중 하층 장교, 사병들과 많은 군인가족, 제대사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렇듯 군민주화를 바라는 뜨거운 동참이 거대한 파도가 된 적은 해방이후 처음이었다.

그러나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을 무색케한 일부 정치군인들의 기무사를 동원한 치밀한 정치개입과 과잉충성은 민·군 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바라는 4천만 민중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공군방공포병사령부와 육군기술병과학교의 여당홍보 정신교육과 교육교재, 국군통신사령부 예하부대의 기상천외한 전화를 이용한 대리투표, 군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입증하는 육군 3군사령부의 '건강한 부대관리'라는 제목으로 포장된

9) 한겨레 신문, 92. 4. 5일자 참조

총선과 대선을 대비한 선거지침문서가 공개¹⁰⁾되고, 일선부대에서 기무사요원이 부재자투표용지를 일괄수거¹¹⁾해 기무대에서 바꿔치기 했다.

장교, 사병들의 목숨과도 같이 귀중한 자주적인 주권의 한 표를 무참히 짓밟으면서 그들 스스로의 추악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더욱이 이지문 중위를 이등병으로 강등, 파면시켜 군복을 벗기고(나중에 지나 긴 재판을 통해 명예 회복, 현 서울시 광역 의원), 이원섭 일병을 기소유예 처분한 국방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는 높아만 갔다.

광주 학살로 민·군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9사단장 출신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다. 그 반대편에는 바로 그 9사단 출신 이지문 중위가 군의 생명인 명령과 기강의 상징인 자랑스러운 중위계급장 대신 이등병모자를 쓴 채 “자기 자신이 양심선언으로 군복을 벗는 마지막 군인이기를”바라며 국민을 향해 물었다.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무조건적인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장군과 군의 잘못된 현실을 고발하는 양심적인 청년장교와 사병, 이들 중 누가 진정 애국자이며 국가와 군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까?”

이지문 중위의 물음에 대해 처음으로 군·민 관계가 아닌 민·군 관계라는 말을 자리잡게 한 예비역 준장 표명열(전 육군 정훈감)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표명열 예비역 준장, 「누가 군을 욕되게 하는가」

표 준장은 92년 4월 5일자 한겨레 신문에 「누가 군을 욕되게 하는가」라는 글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중위의 양심선언은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군대란 본디 정직을 생명으로 한다. 정직하지 못한 군인은 이미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것이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도 병영생활이라는 특수한 여건에 놀려 굴종적 타협과 좌절과 패배의 경험을 가진 병사들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적과 싸울 수 있겠는가.”라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휘말려 우리 군이 상처받고 불신 받는 일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차체에 반드시 강구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는 바램도 남겼다.

그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기무사의 역할을 엄하게 꾸짖었다.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무사의 역할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 군을 진정으로 강한 민주군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또 국가 안보에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기무사가 전문화를 바탕으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히 정진하기 위해서도 지금과 같은 권력지향적인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의 기무사에 대한 비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 이 지구상의 문명한 어떤 나라의 군대를 보더라도 우리 군의 기무사처럼 지휘권 중심의 군 조직 기본원리마저 무시한 채 무소불능의 절대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연대급에 지원 나와 있는 기무사 간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연대장실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다. 자기보다 훨씬 계급이 높은 연대장의 근무태도, 동정 및 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연대장의 확인이나 진술을 받을 필요도 없이 그대로 자기사령부에 보고한다.”

기무사의 정치지향적인 역할이 결국 일선 간부들의 군 생활을 감시일변도라 지적했다. “이러한 보고 내용은 그 연대장의 승진·진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있다. 얼마든지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간부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항상 저자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한때 전체 육군의 정훈교육을 책임진 표 정훈감의 따끔한 충고는 이렇게 맺는다.

“나의 군 생활 중에 기무사 요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어떤 공식적 발언이나 문서도 본 적이 없다. 세상에 이렇게 항상 옳고 완전 무결한 조직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비판과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항상 빛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10) 위 신문, 92. 4. 24일자 참조

11) 위 신문, 92. 5. 5일자 참조

군을 바로 세우려는 역사는 도도히 흐르며 반복되는가.

13년 전 88년 7월, 육사(32기)출신 임택준 중령이 대통령에게 군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한 31개항의 고발문을 내며 양심선언 한 뒤 한번 강산이 변해 '제 2의 임택준'인 손대희 중령의 양심선언이 터졌다. 전방의 현역 대대장인 손중령이 97년 대통령선거를 보름 앞두고 이회창후보 아들의 병역기피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양심선언이 그것이다. 그는 이 양심선언으로 보직해임 돼 군법회의에서 근무지 무단이탈 및 정치관여금지위반으로 1년형을 선고받고 98년 10월1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는 99년 2월 호에 실린 월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병역기피의혹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 중령이 10년 전 군 인권의 무법자들을 고발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면 그는 병역을 기피하는 특권층에게 비판을 가했다. 그를 양심선언 하도록 마음을 울린 것은 한 사병과의 면담 중에 "누구는 돈도 없고 백도 없어 이 추운 곳에서 고생하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 소록도에서 노래방이나 다니며 편하게 군 생활을 한다"는 말이었다. 감옥을 나온 그를 괴롭힌 것은 평생 군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손 중령을 조선일보가 시국선언을 '이적행위'라며 명예를 훼손한 것이었다.

임 중령의 육사 출신 군 생활 17년, 손 중령의 ROTC 19기 출신 군 생활 18년은 비록 타의에 의해서 마감되었지만 많은 후배 장교들과 함께 양심선언 출신 고급장교로서 군민주화를 향한 기나긴 여정은 희망을 앞두고 있다.

표 명열 준장의 따끔한 충고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에게도 이어진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이 총재가 표 준장을 비롯한 예비역 장군들에게 편지를 보내자 표 준장은 한겨레신문 2000년 1월 11일자에 기고한 '이회창 총재에게'라는 글에서 "그렇다면 혹시 이 총재께서는 과거 독재정부가 정권 안보를 위해 고문을 통해 조작한 간첩사건들, 억울한 의문사를 만들었던 많은 일들이 애국적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때가 좋았다는 향수를 느끼고 계신 것은 아닌지?...안보 역량 강화의 기초는 무엇보다 '살맛 나는 세상'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은 나라' '지도층 자제들이 앞장서서 군 문에 입대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고 손 중령의 선배(?)답게 이 총재에게 따끔하게 답장했다.

하늘같은 예비역준장의 따끔한 충고에 많은 예비역병장들이 독자투고를 통해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을 보여준 것은 정치권의 외풍에서 군대를 바로 세우려는 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같은 신문 1월 26일자에서 최영환 씨는 표 준장에게 박수를 보낸다면서 "나는 예비역준장이 얼마나 높은지 모른다. 다만 우리처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겐 너무 멀게 느껴졌다. 친히 그렇게 딱 부러지는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다. 이 총재는 이제 함부로 이렇게 글을 쓰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좋은 글을 쓴 표명렬 예비역 준장께 고맙다는, 멋지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차분히 군대를 바로 세우려는 희망 섞인 대화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유는 양심의 목소리는 인간의 소리이자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10년째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91년 「애국군인」 사건의 권대현

20세기의 무덤에 갇힌 자, 권대현을 아는가?

필자는 '송창식 노래를 좋아하던 털털한 청년' 애국군인 32살의 권대현을 소개할까 한다. 91년 「애국군인」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는 당시 「애국군인」 사건으로 국군 기무사령부와 군 교도소 생활 후 정신분열증에 갇혀 지금껏 10년째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동아대학교 영문학과 88학번이었던 권대현, 대학 2학년 때 53사단 단기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동아리 선배인 서재호(33)씨 등 9명과 함께 '애국군인' 이라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91년 3월 21일 긴급 체포되었다. 이후 국군기무사에서 20여 일간의 조사를 받은 후 소위 '남한산성' 이라 일컬어지는 군 교도소에서 9개월을 복역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같은 해 11월 출소했다. 출소 뒤 권 씨의 모습과 생활은 정상궤도에서 멀찌감치 비껴나 있었다. 영창에서 길들여진 기상, 취침시간에 맞춰, 방 안의 모든 물건은 군대식의 '각' 을 잡아 정리했다. 간단한 대화의 경우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곧 알아들을 수 없는 자신만의 이야기로 빠져들었다. 10년 가까이 여전

히 갇힌 수인처럼 살고 있다.

또 사라지는 개구리 군복

93년 11월~94년 군 구속자만해도 평화실현 학생연맹사건의 신평식 씨를 비롯한 3명을 포함해 15명이었고 95년에 52명, 96년에 54명, 97년에 47명으로 이때까지 모두 168명의 군인들이 구속되었다. 기무부대는 양심적인 군인들 164명을 군 교도소로 보내는 일에 술선수범할 게 아니라 168명의 특권층의 군기피자를 군에 보내는 일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1996~7년도는 '민족해방군 조작 사건' 탄압을 중심으로 벌어진 100명이 넘는 양심적인 군인들에 대대적인 탄압의 해였다. 96년 가을의 북한 잠수정 출현의 여파로 사회와 군대전체를 바짝 얼어붙게 한 뒤 양심적인 군인들을 탄압하였다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는 1948년 여순항쟁 뒤 일어난 다음 해인 49년부터 한국전쟁직전까지 진행된 양심적인 군인들에 대한 대규모 숙군작업 이후 최대의 탄압사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1992년 이치문 중위 사건으로 폭발된 일반 사병들의 대중적인 군부재자 부정투표 폭로이후 96년의 연세대사건 진압과 함께 한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탄압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은 물론 강원, 대전, 전주, 부산, 진주 심지어 제주까지 온 나라 곳곳에서 학생운동 출신 양심적인 군인들은 면회 길에서, 또는 내무반에서 잠자다 말고 영문도 모른 채 기무부대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갔다. 양심을 저당 잡힌 기무부대는 그래서 반공, 반북의 보루인 군대 안에서는 절대로 양심적인 민족군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 잡듯 잡았던 것이었다. 이는 거꾸로 그만큼 군의 자주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군대 울타리 안에서 양초처럼 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사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많은 학생운동의 전력자들이 군 입대를 하였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시위 전력자는 곧 좌익이고 그것은 또한 군 내부와 적이라는 논리는 군대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며 국방부와 기무부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에 한치의 헛점이 없기를 바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기무사는 양심적인 군인들을 더욱 노골적으로 못살게 하기 위해 '로보캄'까지 갖췄다. 1999년 12월2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서 기무부대 소속 군 사법 경찰관의 수사 관할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된 법은 그동안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범죄에만 적용하던 기무부대의 수사관할권을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로까지 확대한 것이어서 모든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급기야 2000년 1월 3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은 '기무사 수사권 확대에 대한 논평'에서 "오늘날 남북교류협력법과 집시법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권을 확대한 것은 집회·시위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되는 권리를 누리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군인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인권 유린으로 이어질 이번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발끈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 변호사는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엔지오'란 책에 쓴 적이 있다. 지금 한반도 사람들이 손과 발로 뛰고 싸우며, 머리와 가슴으로 함께 꾸어 온 그 꿈이 현실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것은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관계의 정상화이다.

바로 한국전쟁의 교전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끝나는 문제는 한국 사병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한국군이 모든 구성원과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희망의 군대로 바로 설 것이냐 아니면 분단과 권위주의적인 군대모습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냐'하는 기로에 서 있다. 필자는 '우리군대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라 확신한다.

군의 변화가 제일 눈부시다. 바로 한국군이 비로소 미국한테서 벗어나 군의 주인이 된다. 국민의 군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군이다. 그야말로 '함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사람냄새가 나는 군대, 토론이 있는 군대, 인터넷접속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1인당 한 대씩 있는 군대. 압록강 아니 만주벌판에서 보초와 불침번서는 군대. 155마일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 인민군과 한국군이 말타기하고 강수월래하는 군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리가 본 희망의 한국군대는

첫째,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질적 첫 조치로 이름뿐인 유엔 사령부는 해체되고 미국한테서 전시 작전지휘권까지 실질적으로 되찾게 된다. 주한미군 철거를 시작으로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군축이 이루어진다. 남북간의 불가침조약이 발효되고 남북합의서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된다. 한미연합사는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으로 해체되고 한국군은 미국의 동북아시아령부 개편계획의 역할분담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상호 방위조약 등의 한미군사동맹은 개폐되고 한국과 미국간에 서로 대등하게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새로운 조약이 만들어진다.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는 해체되고 서로 대등한 군사교류회의체만 가동된다. 한반도 내에서 '핵에 관한 법령'을 정해 외국군대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반입, 운반, 조립, 축적, 생산에 대해서 강력히 통제를 한다. 이제 한반도는 핵무기 실험장이나 연습장으로 혹은 핵무기 대리전쟁터로 사용하지 못한다. 남한과 북한이 지역별 비핵지대화선언을 한다. 강대국들의 핵은 먼저 폐기되고 특히 일본의 비핵지대화를 요구한다.

둘째, 한국군의 주적 개념은 '동족'인 북한이 아니라 '외적'인 제 3의 적으로 바뀌어 남북한이 공동으로 안보를 지킨다. 통일군대로 바뀐다. 미·일·한 세 나라, 한·미 두 나라의 합동군사훈련은 중지된다.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불법적인 정찰은 중지된다. 휴전선주위의 대인지뢰, 대전차지뢰는 모두 없어진다. 미국군사학교에 한국군의 장교파견은 중지한다. 한국 국방부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은 사라진다. 노근리, 매항리, 제주 4·3학살 등의 박물관이 생겨 하루에 1만 여명이 견학한다. 휴전선과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문제에 대해 미군과 한국 국방당국이 전면조사한 뒤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사죄, 배상한다.

실질적인 군축이 이루어진 희망의 군대 분위기에 맞춰 남북한 군인들의 체육교류가 시작된다. 남북연합군대구성을 위한 회의를 시작하고 공동군사훈련도 머지 않았다. 그 뒤 남북군인이 압록강에서 함께 보초를 서게 된다. 남북한의 연방군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를 위한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합동 군사퍼레이드를 평양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일년에 두 차례 연다.

셋째, 전시 접수국 지원협정(WHNS), 한미행정협정(SOFA)등 한미 사이의 각종 군사, 행정조약은 철폐되어 필요 없게된다. 주한미군은 철수를 시작하고 그 동안 주한미군에 대한 총 지원비용 수 십 조원을 차츰 차츰 한국에게 돌려준다. 미군기지의 한국인 노무자는 한국정부가 주선한 직장으로 돌아간다. 관세 및 과세 특혜된 세금은 미국에 소급 징수한다. 미군이 그 동안 불법 점거한 8천만 평 이상의 미군 공여지를 전면공개하고 돌려 받는다. 경기도 화성군 매항리를 비롯한 군산 등의 미군기지 철수와 함께 그 지역은 주민들에게 돌려지고 평화적으로 사용되며 최대의 오염지역인 미군주둔기지를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데 미군이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기지주민들에 대한 피해배상은 미국이 즉각 실시한다. 과거의 11만 건의 주한미군범죄는 전면 재조사되어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 희생자들에게 미국이 배상을 하게 된다. 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한다. 주한미군범죄는 영원히 사라진다. 당국의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생활보호 대책이 발표되고 기지촌을 특별지역으로 선포해 건전하게 개발한다. 한국이 군사협상과정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에 임하게 된다.

한·일 군사협력은 중지된다. '한국 국방부'의 이름으로 일본의 성적노예 '군대위안부'의 진상규명, 사죄, 배상을 일본 방위청에 정식으로 요구한다. 각 부대 '정신교육관'에 일본의 성적노예 '군대위안부' 할머니들의 영정을 걸어놓고 다시는 외세군대에 '민족의 자궁'인 여성들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마음에 새긴다. 전범국 일본 국왕의 방한은 있을 수 없고 일본의 완전한 과거청산이 있는 뒤 다시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본다. 전범국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은 저지된다. 일본에 끌려간 징병, 징용, 근로 징진대, B·C 급 전범, 문화재(금괴를 비롯한), 재일교포 지위

문제도 해결된다. 남북한이 유엔을 미국주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 자리잡도록 힘쓴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군사외교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 독도에 일본의 순시선이 얼씬거리지도 못한다.

넷째, 획기적인 군축과 함께 국방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어 무기도입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쓸데없는 도입은 줄어들고, 미국무기 구매강요는 사라져 해외무기구입이 줄어든다. 과거의 무기구입과정은 '무기청문회'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진상규명된다. 미국도 다른 나라와 함께 동등하게 무기구매과정에 참여한다. 무기거래상은 많은 부분 공개되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무기구입과정의 부정커미션, 리베이트는 없어진다. 미국에 지불한 무기기술도입시의 로열티를 전면 공개한다. 미군방위분담금, 주둔부담금을 비롯 각종 무상지원내역을 공개한다. 미국 항공모함의 한국입항은 거부된다. 미군이 지난 시기 불법적으로 들여온 PX물품 품목을 공개한다. 과거 미군 골프장의 본국 송금액을 공개한다. 부패·특권·신분증 미군속 신분증은 즉각 폐기한다.

미국반성의 날을 정해 미국이 한국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참회하는 날로 한다. 한국전쟁 때, 그리고 정전체제하에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크고 작은 군사충돌과정에서 생긴 희생자들의 영령을 추모하는 합동위령제와 합토제를 판문점에서 지낸다.

홍치산 시인은 희망의 그날을 「통일 그날」이란 시에서 노래하고 있다. (홍치산, 「10분사랑」, 두리.96. 2. 25)

전 세계 기자들 후레쉬 터져 / 휴전선이 무너지고 지뢰가 뿔뿔이 났다 / 비무장지대엔 미군 훈련포탄 대신 축포가 오르고 / 대남 대북 비방 소리 통에 통일 행진곡 / 조선은 하나다. 심장이 뛰고 / 소리치며 아우성 치며 달려와 안기는 / 동포의 뜨거운 포옹이 가슴 터지게 껴안을 때 / 서서히 현실임을 알았다 / 형제부모를 만난 이산가족 / 아직도 믿기지 못한 사람들 / 자기 살을 꼬집고 나서야 환호성을 질렀다 / 세포 구석구석 환희로 기질할 것 같고 / 씩씩이도 푸저 누구든 집에 있는 술과 음식 / 마구 내놓았다. 노동자 학생 농민 / 남과 북의 풍물패들 수 만 명이 축포소리에 맞춰 밤을 새워 / 일렁이고, 풍물치다 지치면 팔도 아리랑을 불렀다. / 수경이 누이가 단상에 올라가 인사를 하고 / 그간의 모으든 수난도 다 씻어버리고 오로지 / 기쁨으로 터질 듯한 눈물

놀다 지치면 하나 둘 이름도 몰랐던 동포들 / 서로 자기 집에 가자고 / 이남 노동자 농민 이북 노동자 집에 가보기도 하고 / 공장에도 가보고 농촌에도 가보고 / 이북 노동자 현대 조선소에도 가보고 / 이북엔 이게 좋구나 / 이남엔 이런 것이 좋은 거구나 / 우리 노동자가 힘을 합치면 / 우리 농민이 힘을 합치면 / 농산물 외국에 의존 안해도 된다고 / 전세계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다고 / 떠오르는 동해 해돋이 여명을 보며 무쇠 팔뚝 굳게 껴안았다.

한국군대의 올바른 자리 매김을 위하여

민족의 군대의 군민주화 내용은 더욱 보기 좋다.

군을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군의 민주화」의 내용은 군이 극소수 정치 지향적인 세력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비민주적인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병사들과 초급장교들의 민족 의식, 민주의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인격적, 정치적 권리를 찾는 의식을 형성하는 자발적인 토론이 시작된다. 특히 군을 구성하고 있는 사병, 하사관 양심적인 직업군인, 군무원들은 물론 그 가족, 애인, 제대군인들이 국민의 군대로 바로 세우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첫째, 군의 정치적 중립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한때 외세와 손잡고 군을 이용하여 정권을 잡았던 극소수 군부세력들은 나치에 부역한 자들의 과거 청산처럼 영원히 단죄되고 그들이 저지른 추악한 무기 도입비리, 국방예산 낭비, 병역비리와 양민학살, 군 의문사 등은 전면적으로 밝혀진다.

군대내 성폭력 행위자는 구속하고, 성폭력 백서에 실리며 군대내 성폭력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양심적인 병역 거부

자들의 권리는 인정되고 징총거부, 군사훈련거부 등 양심의 권리는 보장된다. 정치적, 종교적,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한 탄압에 대해 군당국의 속죄와 배상이 이루어진다.

각종 비리 백서가 발간되어 진중문고에 비치한다. 군수물자도입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해 공사입찰, 군납품에서 각종비리는 사라진다. 남대문시장에 군화, 대검, 수통, 총기류등 군수보급품이 돌아다니지 않게 된다. 부패무능한 군지휘관에 수여된 상훈을 되찾는다. 그 뒤 중립적인 군부와 정당, 주민, 사회단체 대표로 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이는 군의 정치군인화를 막고, 사병을 개인적으로 부려먹는 私兵化현상을 막고 권위주의체제를 벗어버리기 위함이다. 군의 헬기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사회조직으로서의 군은 봉건적 잔재를 없애기 위해 닫힌 문을 열고 예산, 조직, 운영에 있어서 세세한 내용까지 공개의 원칙을 지킨다. 군의 큰 폭의 행정정보공개만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신뢰를 쌓는 길이므로 군사기밀은 대폭 줄인다. 장관, 군사령관, 군단장을 비롯해 사단장, 연대장급 이상 군지휘관의 판공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비대화한 고급장교를 대폭 줄이고 인사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세워, 예산의 낭비와 정실인사를 배제한다. 학연, 지연, 혈연을 타파한 공정인사가 실현된다. 상훈도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중복되어 비대해진 부처산하기관인 홍보, 연구, 체육, 복지, 연금시설 등은 통폐합한다. 군 골프장은 제대군인들의 심신 단련장으로 하고 평화도서관 부지로도 확보된다. 전쟁기념관은 평화기념관으로 탈바꿈한다. 희망의 한국군대는 '작지만 강한 군대'가 된다. 전시동원체제는 의세의 침입 때만 운영된다.

둘째, 국군기무사는 구조조정되며 군 수사기관도 군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구조조정에 참여한다. 이제 군대 안의 모든 사고는 객관적인 조사기관에 의해 진상조사가 시작된다. 해방이후 군 의문사 당한 병사들과 각종 군폭력, 군기사고와 안전사고로 사망, 부상한 병사들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정당한 배상이 있게 된다. 그들은 국립묘지에 묻힌다. 동시에 80년 강제징집부터 모든 군의문사, 군폭력 사고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 다시는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는 재발방지법이 만들어진다. 희생자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합동 위령제를 실시한다.

이제 '재향군인회, 성우회등 퇴역군인 단체들이 지난 50년 동안 이데올로기는 격정해도 군의문사를 비롯한 후배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제기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을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기무사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심적인 군인들의 복무에 대한 탄압과 정치적인 감시, 양심적인 군인들의 사찰카드는 소각하고 사찰활동의 책임자는 처벌된다. 현재구속, 수배중인 양심적인 군인·전경들은 석방, 수배 해제되고 각 사단 영창과 군기 교육대는 없어서 사병인권상담실로 바뀐다. 80~90년대 양심선언 군인 전경, 양심적인 군 구속자 등 부당하게 불명예제대한 군인들은 명예가 회복된다. 군 교도소는 폐쇄성에서 벗어나고 소내 인권유린의 책임자는 소급 처벌되어 군의 장교, 사병인권현장이 발표된다. 또한 사병들에 대한 극우적 반공반북이념의 「정신교육」은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고취할 평화, 통일교육으로 바뀐다. 우편물, 도서, 면회, 소지품 등에 대한 검열은 없어진다. 전자위문편지가 생긴다. 방위산업체의 노동자 탄압은 사라지고 방위산업체는 평화산업으로 전환된다.

셋째, 현역병의 과도한 복무기간을 3군이 균등하게 일차적으로 12개월로 준다. 이어 병력감축, 무력감축과 동반하여 방위비는 일차적으로 절반으로 줄여 국민들의 군사비 부담을 대폭 줄인다. 나아가서는 중국적으로 징집제도를 철폐하고 지원병제도, 완전한 직업 군인제를 실시한다. 또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예비군과 민방위제도는 점차 폐지시켜나가고 위법적인 준군사조직 전투경찰대는 해체한다. 지원병제도 실시로 그 동안 변형된 병역의무인 카투사, 의경, 경비교도대,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없어진다. 병영 안의 각종 전투부대에서는 대민 시위진압훈련이라는 충정훈련을 중지한다. 그래서 내무반에서 군화를 신은 채로 뜯눈으로 비상대기하는 일은 없어진다. 내무반은 더 이상 '수용'시설이 아니라 사병들이 개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 신병 교육대와 내무반에서 일제 잔재인 '점호'는 사라진다.

또한 군입대자들을 둘러싼 각종 병무행정의 청탁과 부정비리는 철저히 밝혀지고 부정하게 병역의무를 피한 자는 다시 군에 보내진다. 병무청은 '병역지원청'으로 바뀐다. 신병 자대배치는 스스로 보적을 정하며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군의 낭비예산을 막아 생긴 자금으로 징병제당시의 군체대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소급 적용된다.

넷째, 군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병들과 하사관, 초급장교들의 처우개선 및 인격적, 정치적 권리들을 신장시키며 구타와 가혹행위가 없는 병영생활의 민주화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사병들의 근무시간외의 개인 사생활은 보장받는다. 이를 위해서 직무이외의, 혹은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모든 군대매체는 통일지향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남북한간에 사병들의 교류가 있게 된다. 군대 안에서 반민족적인 조선일보, 스포츠조선은 구독이 금지된다. 군의 현실을 왜곡하고 회화화하는 모든 군 프로그램은 중지되고 동족에 대해 반복의식을 고취하는 '쉬리'의 상영도 중지한다. 군사평론은 자유로워 성역은 없어진다. 부대시설과 운동장은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더 이상 군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아 대민 피해는 없어진다. 1년에 한 달 이상 의무적으로 대민활동을 나가 민·군 협조를 도모한다. 육사 등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제도를 비롯 양심적인 민족간부를 기르는 도장으로 자리 잡는다. '쿠데타박물관'을 세워 한때 군 지휘관들이 국가방위를 소홀히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산 탱크와 총구를 민중에게 들이대 정권을 찬탈한 치욕의 역사의 현장으로 교육한다.

다섯째, 군대 안에서 내부에서 군민주화를 저해하는 군사법원법 (옛 군법회의법)을 비롯한 각종 군 관계법은 개정되어 사병들의 권리를 앞장서 보호하는 법과 기관으로 바뀐다. 유신 직후 제정된 「군사기밀 보호법」, 5공 당시 국보위 등에서 만들어진 「국방보도규정」 등은 폐지되고, 민간인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모든 군 관련자료들은 시급히 공개되어 군의 역사는 객관적으로 다시 쓰여진다. 또한 사병들은 군사운영과 식단작성에도 적극 참여하게 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며 일부 하사관, 직업군인 등도 '주식투자'에 눈을 돌리지 않고 '국방'에 몰두하게 된다. 중산층 생활을 할 수 있는 급여와 군인연금, 보험에서 노후안정을 보장한다. 직업군인들이 이삿짐을 싣 채 낡은 군인아파트를 전전공공하며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군대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군이 미국과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 주인노릇을 하며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는 통일지향적인 희망의 군대로 행군하는 데는 양심적인 장, 사병들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사회에서는 군인들의 인권 및 민주화, 자주화에 대한 상시적 지원, 대책기구 결성이 요구된다. 군대를 바로 세우는 구체적인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주변의 처지에서 군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종교, 노동, 단체 등에서 평화/병영 아카데미를 통해 군사정세, 군의 역사, 군의 현주소, 국방예산 평가, 군산복합체의 실체, 주한미군, 평화교육, 군인의 인권, 여성과 평화와 군대, 병역의 의무문제, 군축 - 무기를 보습으로, 평화와 통일, 기지활동가 강연, 양심적인 군인, 군사평론가 등 군을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의 강연, 토론회, 만민공동회, 분쟁지역 평화기행, 집회와 서명 등을 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군 관련단체로 군인의 전화, 군인권상담소, 평화를 위한 군인회, 평화를 위한 재향군인회, 통일사회를 위한 군인연대, 민주군대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군인들의 모임, 군인들을 위한 민주인터넷 방송국, 군에 자식들을 보낸 어머니들의 모임, 군에 사랑하는 애인들을 보낸 여성들의 모임 평화통일 군사평론가협회, 민족방위를 생각하는 군원로들의 모임, 군산복합체를 걱정하는 군인들 등의 모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민주적인 '군사' 인터넷사이트 개설로 네티즌을 만나가며 여론을 만들어 나가며 재미처럼 일할 때 그 기초는 더욱 튼튼해진다.

시 「통일 그날」은 희망의 그 날을 노래하며 계속 이어진다

아! 그날 / 김현희는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으며 / 자유총연맹 사람들, 안기부 사람들 가슴에 환희가 오를 수 있을까! / 아니 꼭 그들이 아니라도 / 민족 지상과제 통일성전에서 안락을 찾아 / 낙오된 수많은 사람들도 기쁠 수 있을까. / 통일을 반대하던 모든 사람들 / 이처럼 춤추고 기쁨에 눈물이 심장에 흐를 수 있을까! / 다들 기뻐서 늘

때 / 쭉그려 앉아 멍뚱뚱 구경이나 할까!

그런 친구들 손을 잡아다 신나게 풍물판 가득 돌아보리라 / 통일을 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미제가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내일 아침이면 이제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세금, 국방비의 무게에 짓눌려 피곤에 지친 지하철 승객들의 눈동자에도 비로서 생기가 들고 빛이 나기 시작한다.

희망의 군대가 있기 때문이다. 국방비가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더러운 부패 군인 뿐이야/ 낡은 권위주의 뿐이야/ 육군개혁은 인정 못 해/ 더는 못 참아/ 누가 누구 군기 잡는 거야/ 의식화라고 마음대로 떠들어/ 이젠 바꿀 거야/ 사병들의 심판 뿐이야/ 바뀌 바뀌 군대를 다 바꿔...

유행하는 노래가사와 함께 지구 반대편 스페인에서 95년 12월 현재까지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한 청년학생들이 30만명이나 되었다는 된다는 소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2005년 시원한 가을 어느 날, 물가의 독수리 떼나 까마귀 떼가 완전히 몰려갔고 남북의 멧돼지와 사자가 친구가 되어 남북 연합사령부를 만들어 한민족을 지키는 코리아연방 군인으로 태어났다. ■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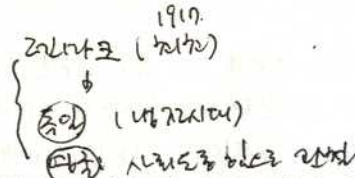
1. 군사 개혁 문제
2. "북리스크 우리도 문제, 사병 만수무강"

과노신안 → 리스크 ; 리스크는 경계지리!

병역제 - 남북경계 / 구축 / 방위비 문제

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덧붙이는 얘기들

이대훈 (영국브래드포드대학 평화학, d.lee1@bradford.ac.uk)



“내가 (평화주의자들로부터) 자주 들던 말 중에 하나는 ‘당신 아이들이 나중에 아빠는 전쟁때 뭐했어 라고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답하겠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나는 곧 가족을 꾸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처럼 병역거부에 우호적이었던 사람들도 대부분 그랬다. 어떻게 이런 먹구름을 머리에 이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가족에 나를 사회의 이단자로 보면 어떻게 하나? 그러던 중 어느 날 대학 다니던 우리 아들놈이 썩 웃으며 집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 친구들, 아버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였단 걸 알고는 너무 좋아하던데요. 대단한 영웅 보듯이 말이에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참 엄청난 충격이었다. 물론 나는 내가 영웅이라고는 비슷하게 생각해 본적도 없었다. 아마 시대가 변한 것이겠다. 이제 대학 게시판에는 ‘당신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아빠, 전쟁때 뭐했죠?’라는 글귀가 적히기 시작했다...” (토니 랜들스)

“우리는 정말 광야의 외로운 외침 같았다. 정말 그 당시 우리는 그렇게 느꼈다 - 거대한 흐름에 맞서는 소수 집단. 그 당시 분위기는 대단한 압박이었다. (양심적인 병역거부의 대가로) 우리는 동료들과 서로 10여년간 만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작용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게 아마 그런 결단을 내린 사람들의 특성과 그 시대, 그리고 그 환경의 어려움이 합쳐져서 그런 의식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정말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었다...” (오드리 굿프랜드)

“얼마전 나는 공군에서 막 제대한 조카와 추수감사절 식사를 함께 했다. 우리는 모두 기독교 집안이 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나에게 물었다. ‘왜 평화주의자가 특별히 더 부각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 아닌가? 그리고 모두 각자 자기 갈 길이 있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무언가 중요한 얘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답했다. ‘자네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F-104 전폭기 조종석에 앉아서 폭격에 몸을 드러낸 도시로 향하는 모습을 말이네. 만일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고도 기독교인이라 믿는다면 나는 기독교인임을 포기하겠네.’ 조카는 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적이 없었어요.’ (알 존스)

(이상은 모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양심적인 병역거부자의 증언, 출처: 뉴욕 반전연맹 엮음, 물결을 거슬러: 2차 세계대전 당시 평화주의자들의 저항 수기 모음 Against the Tide: Pacifist Resistance in the Second World War - An Oral History)

“19세기의 (유럽)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징집제가 전쟁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 나폴레옹이 시작한 이래로 프랑스와 독일은 150년 동안 징집제를 시행했는데 둘 다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패망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했다. 거기에 한가지 이유는 평화적 시기에 청년층 한 세대 전체를 전쟁을 위해 훈련시킨 데 있다. 그렇게 해서 한 세대 청년층들이 전쟁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

하도록 만들고 또 정치인들도 힘의 정치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고무시켰던 것이다..." (케슬린 론스 데일, 화학자, 1945년 영국 왕립학회 회원, "Conscription in the H-Bomb Age"에서)

죽음: 사회폭력에 맞기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노력.

양심적 병역거부자

1. 양심적 출발: 사람의 양심에 따른 결정은 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심은은 희생한 사람 양심"은 폭력에
인간적 리가 제공!

우리 사회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소수 특별한 신앙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공공 토론의 장에서 말조차 꺼내기 힘든 주제다. 그러나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은 인권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기관들이 전면 인정해야 하는 기본적 인권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며 이 기본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¹²⁾으로 그 타당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을 논의하기 힘든 것은 인권이 설정하고자 하는 영역, 즉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개인의 불가침적 자유 영역이 여전히 국가권력과 사회문화적 폭력 아래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대부분의 종교가 살상의 금지를 기본 교리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 신앙인만이 지금까지 행동으로서 '집총 거부'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종교의 자유라는 영역 역시 국가권력 또는 국가주의 그리고 사회문화적 전통¹³⁾ 아래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 불안한 영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과정의 하나일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는 무기의 사용과 훈련을 거부하는 집총 거부자부터 군사적 훈련과 복무 일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까지 존재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강제징집 자체를 반대하기도 한다. 일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전은 참여해야 한다는 전쟁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16세기 유럽에서 기독교 메노교파가 시작해서 17세기 영국 우애회 교파, 18세기 독일의 형제교회 교파와 러시아 두코보르 교파로 확산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두 상당기간 동안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흐름을 지속, 확산시켜왔다. 1, 2차 세계대전 때 웨이커 교파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징집거부 참전거부를 하면서 병역거부운동은 병역거부자의 인권존중과 대체복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에 부각시켰다.

주로 종교적 배경의 이러한 흐름은 핵전쟁을 전제로 한 냉전체제에 들어오면서 핵무기에 대한 자각과 베트남전과 같은 강대국의 횡포에 대한 자각과 결부되어, 종교와 무관한 '세속적' 병역거부의 흐름으로 확대된다. 그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력과 전쟁 일반과 관련된 절대적 거부와 핵무기나 특정 전쟁과 관련된 선택적 거부로 나뉘기도 한다. 아울러 세속적으로 확대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은 필연적으로 국제인권기구의 논의에 영향을 미쳐 냉전 종식 이후 구체적인 결의안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징집대상자로서 양심상의 이유나 종교적 인종적 도덕적 인도주의적 정치적 또는 유사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국제앰네스티¹⁴⁾, 1991년). 이는 무기를 들기를 거부하는 집총 거부와는 질적으

12) 유럽의 경우 유럽인권협약 9조.

13) 여기서 사회문화적 전통 내지 폭력은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남성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 본 토론의 주제가 아니므로 상세한 논의는 하지 못한다.

14)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위 정의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구금 또는 투옥되었을 경우 그 사람을 양심수로 간주한다. 국제앰네스티가 구금 또는 투옥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양심수로 간주하는 데에는 구금 및 투옥의 이유가 아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1991년 자료 기준) (1)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와 그런 사람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법적 규정이 없는 경우 (2) 병역 거부 신청자가 신청권을 거부당했을 경우 (3)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부에게만 허용되고 위 국제앰네스티의 정의대로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 (4) 징집이 된 이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자 했을 때 거부되는 경우 (5) 병역기간 중 새롭게 판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기로 하여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을 경우 (6) 순전히 민간통제하여 순전히 민간적 성격의

로 다른 규정으로서 살상을 전제로 하는 무력의 사용과 전쟁, 그리고 군대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개인의 양심과 윤리에 따른 판단과 연관을 갖고있다.

2. 유엔에서의 인권 규정

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법적 근거

-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uzbir tibi / xuzdi*)
- 1950년 확정된 국제법의 뉴렌베르그 원리 중 제4원리 ("자국 정부 또는 상관의 명령에 다른 행동이라도 행위자가 도덕적 선택권을 가졌을 경우 국제법상 제기되는 의무를 방기할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와 제6원리 ("아래 범죄는 국제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a-1. 평화를 파괴하는 범죄: 국제 조약, 협약, 보장에 위반한 전쟁 또는 침략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및 전개 행위...")

- 그 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상의 불차별조항, 고문금지 조항, 공정한 재판 및 처벌 조항, 임의구금 금지조항, 난민신청자 보호 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나. 국제인권기구에서의 심의 및 결의

- 1984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7호로 유엔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검토하도록 위임 결정.

- 유엔 인권위 결의안 1987년 46호: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정당한 행사"로 결의.

- 유엔 인권위는 1989년 결의안 50호에서 위 사항을 재확인하면서 각국이 필요할 경우 기존의 법령을 수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도록 촉구함. 아울러 "강제 징집제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제도가 미비한 경우 다른 나라의 선례를 참고로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대체 복무를 제공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투옥하는 일을 자제할 것"을 권고함. 동 결의안은 또한 "대체 복무는 원칙상 비전투적 성격의 민간 업무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유럽의 경우 유럽공동체의 유럽위원회 장관회의 결의안으로 1987년 대체복무제의 실시를 지지하고 1990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유엔 인권위 결의안에 근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1993년 시민적 정치적 인권을 다루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별칭 자유권 규약 또는 인권 B규약)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 조항과 관련 일반 의견15) 22호를 채택.

일반 의견 22호의 주요 내용:

대체 복무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7) 대체근무 기간이 병역거부에 대한 징계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될 경우.
15) 일반의견(General Comment)은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심의하는 국가보고서 이외에 필요에 따라 규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발표하는 제도이다. 규약의 각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국제적인 기준의 하나이다.

본 규약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 이사회는 이 권리가 치명적인 무력 (lethal force)을 사용할 의무가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 및 기타 신념을 구현할 권리와 심각하게 충돌한다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본 규약 18조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간주한다. 이 권리가 법과 관행으로 보장된 이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특정 신념의 성격에 따라 차별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받을 수 없다. 본 이사회는 조약 가입국들이 각국에서 본 규약 18조에 의거해서 병역을 면제받을 경우 어떤 조건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대체 복무의 기간과 성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 1995년 3월 8일 유엔인권위에서 결의안 83호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 양심 종교적 자유에 관한 인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권임을 재확인.

- 1998년 4월 22일 유엔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 결의한 77호 채택.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결정사항. 유엔 회원국은 이를 사회에 알리고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 : *무주권상태!*

각국 정부는 '양심'과 '기타'는 무시 안함.

- * 1995년 유엔인권위 결의안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된 사실을 상기해야 하며,
- *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양심에 기초한 이성과 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 * 병역 복무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 * 세계인권선언 14조에 따라 모든 사람이 박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며,
- *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따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할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 관심을 촉구하며,
-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들이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독립적이고 편견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며,
- * 각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합당한 대체 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거차 양심적 병역거부*
- * 각국은 병역거부로 인해 거부자가 투옥이나 반복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 * 각국은 병역거부로 인한 박해를 피해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에게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취하도록 권장하며,
- * 병역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절차에 관한 정보가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 *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결의안이 각국 정부, 유엔 전문 기관, 관련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조직에게 전달되도록 조치하기를 요청하며,
- * 차기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의제를 계속 심의할 것을 결정한다. (1998년 4월 22일)

<위 결의안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주요 권리>

- *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 * 난민 보호를 신청할 권리
- * 비보복적 성격의 대체 복무를 선택할 권리
- * 복무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수 있는 권리

- 2000년 4월 20일 유엔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짧은 결의안 34호에서 다음 사항을 결정함.

* 회원국들이 유엔 인권위 결의안 1998년 77호를 기준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현행 법령과 관행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 (정부간 및 비정부) 으로부터 정보를 취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이행 및 침해 상황에 대한 국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법령이 없다고만 간략히 보고됨.)

-->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법령과 관행을 검토했는지의 여부,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한 또는 미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 유엔인권이사회(시민권규약에 기초한 전문가기구)에서 나라별 인권 권고안 또는 심의사항에 여러 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침해사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다. 유엔 인권절차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활용의 여지 / 국제적 합의 수단

- 유엔 인권절차는 회원국 정부에 강제력을 갖지 않으므로, 정부에 대한 압력과 홍보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보통 인권기관의 특별보고관 또는 실무그룹의 보고서, 인권기구에서 회원국 정부에 보내는 통보, 인권기구에서 민간단체가 하는 보고서 제출과 발언, 인권이사회의 자유권 상황 심의결과의 발표, 정부의 유엔 결의사항 및 조약상의 의무 이행 감시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압력과 사회적 홍보효과가 생긴다.

- 이런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인권기구는 유엔인권이사회 (자유권규약기구)와 유엔인권위원회 (가장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인권기구)이다.

라. 유엔 인권절차의 활용 방법

유엔 인권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은 현재 평화인권연대에서 번역 발간 예정으로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유엔 인권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실무적 지침자료에 잘 설명되어 있으므로, 본 자료에는 간략히 언급한다.

(1) 유엔 인권위 관련

- 국제인권단체의 구두 및 서면 발언에 내용 포함.

- 상황 정보 제공 (고문에 관한 특별 보고관, 임의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종교적 특별 보고관, 탈사법적 처벌에 관한 특별 보고관) 이는 신념에 따른 불관용에 관한

- 한국의 지속적인 인권 거부, 법령 미정비, 가혹한 처벌, 구타를 포함한 고문 실태가 지적되도록 활동

(2) 인권이사회

- 한국 정부의 정기 국가보고서에 대응

→ 민선에서 수행.

- 인권단체의 한박 보고서에 내용 포함

- 이사회에 권고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이 포함되도록 목표

(3) 인권이사회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별 제소 (개인통보제도)

- 국내의 법적 구제절차를 모두 시도한 이후 제소 (제소 조건 참조)

3. 구미의 경험

서유럽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는 냉전말기인 1980년대 말에 가면서 급증하였다. 냉전이 정착되고 핵무기 경쟁이 본격화되던 1960년대 초반과 비교할 때 1980년대말 서유럽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평균 6배로 증가했다. 보다 공업화된 북부 유럽의 경우 1990년대 초가 되면 징집가능한 남성의 4분의 1이 양심에 근거해 병역을 거부할 정도였다. 1960년대 중반 연간 4천명 수준이었던 독일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1991년 연간 15만명에 달해 거의 그해 입영자의 수에 육박했다. 냉전 종식 이후 동유럽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동서유럽을 포괄하는 유럽안보협력기구에서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다.

일찍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했던 미국의 경우 베트남전 말기가 되면서 징집자의 수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가 더 많게 되었다. 그리고 징집과 병역반대 운동의 광범위한 확산은 1973년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이유중의 하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자원입대자중 군복무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제대한 사람이 연평균 150명에 달했다. 1990-1991년 부시 정부가 벌인 걸프전 당시에도 1500명에서 2000명 가량의 현역 군인과 파병된 예비병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중에서 4분의 3정도가 해외파병 거부를 이유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1940년대에 미국의 흑인계 이슬람 교인들은 인종차별적 무력분쟁에 참여하지 않는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전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흑인계 이슬람 교인들이 병역을 거부하고 투옥된 기록이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적 흐름에 공통점을 뽑는다면 아래와 같은 도표가 가능하다. (출처: The New Conscientious Objection)

발전단계	국가의 판단 기준	국가 정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기대 목표
태동단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정과 지위에 일관성이 없고 극심한 처벌과 예외적 인정 사이에서 혼란스런 상태		
초기	"평화 교회"의 평생 회원지위 여부	비전투부문 군복무	모든 <u>종파</u> 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모든 군복무 면제
중기	위 기준 및 종교적 이유의 병역 거부	군이 관리하는 대안적 민간 업무	<u>모든</u>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군복무 면제
후기	<u>위 기준 및 세속적 이유의 병역 거부</u>	민간 관리 민간 업무	<u>선택적 병역거부 추진</u>

이러한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사회적 의미를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해가며 국가와 사회의 고정관념을 바꿔낸 결과 쟁취되었다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 초기까지 유럽의 어떤 나라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다가, 영국에서만 6천5백여명이 감옥에 가고 미국에서도 450여명이 투옥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또 우리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어려운 사회적 조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전쟁 광풍과 함께 불어닥친 민족주의 열풍과 그에 바탕을 둔 국가 동원주의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담고 있었다는 점도 기억할 수 있겠다. 이들은 전쟁을 명분으로 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자기가 속한 사회를 어떻게 타락시키는가를 보면서 이에 대한 절망과 도전의 정신에서 병역을 거부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넘고자 했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맥락의 "일관된 반군주

의자" 운동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게끔 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신념을 가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매우 차별적인 처벌을 받았는데 최근 유엔 인권기구의 문서에서 "종교적 및 기타 신념에 근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별할 수 없다... 그 처벌 또한 차별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다. 나라로는 1922년 노르웨이가 처음으로 종교적 및 기타 양심의 진지한 근거에 바탕한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러시아에서는 짜르 시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심한 박해를 받다가 1917년 10월 혁명 직전 케렌스키 정부가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하였고, 이어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려다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소련은 1918-1921년 사이 대체 복무제를 실험하다가 이후 스탈린주의로 돌입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범위는 매우 협소해졌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미국은 다른 강대국과는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였다. 비전투적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군대에 입대해서 그러한 복무를 하도록 허용되었으며, 군복무 일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평화 교회 등 민간기관이 감독하는 농업, 삼림업, 보건업 등 분야에서 순수 민간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었다. 이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판별에는 그 이전 평화 교회 소속 여부에서 종교적 신념의 진실성이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와는 어떤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절대적 병역거부자들이 있어서 이들은 모두 투옥되었다. 그 숫자는 영국에서 여성 214명을 포함해서 약 3500여명, 미국에서는 주로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이었는데 약 6천여명에 달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1963년(영국)과 1973년(미국) 징집제가 폐지될 때까지 이 제도는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미국의 경우 1965년 대법원 판례가 있기 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은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었다. 1965년 대법원 판례에서 이 기준은; "당사자의 삶에서 신에 대한 믿음에 상응하는 위치를 갖는 진지하고 의미 있는 신념"으로 확대되었으며, 1970년 다른 판례에서 "윤리적 도덕적 신념" 역시 종교적 신념 만큼 정당한 기준으로 확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무신론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전쟁에 대한 선택적 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⑩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가장 인상적인 발전은 독일에서 찾을 수 있다. 나찌즘과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독일인들은 그 이후 정치-군대에 관한 문화를 상당한 정도로 수정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권도 그에 따라 급속도의 진전을 이루었다. 나찌즘에 대한 예방 의식과 뉴렌베르크 전범 재판의 정신에 따라 군복무에 대한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부를 중요시하게 된 독일 사회는 1949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연방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였다. 서독이 나토에 가입하고 징집제가 부활한 1959년 이후 연방 의회는 "국가간의 어떠한 무력 분쟁이라도 이에 거부하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민간 대체복무 또는 군대의 비전투직에 복무할 수 있게 하였다. 또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대해서 종교/세속, 군인/민간인 신부, 전쟁 일반/ 특정 전쟁 등의 구분을 일체 두지 않는다. 이후 북유럽 국가들이 이 모델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 확대하고 있으며 냉전 종식 이후 동유럽 국가들도 대체적으로 이 모델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탈냉전 시대가 시작된 1991년 기준으로 볼 때, 강제 징집제를 시행하고 있던 유럽 이외의 43개국 중 어떤 나라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없었다. 앞으로 국내에도 추가로 소개되겠지만 유럽의 경험을 바라볼 때 영국을 개별적인 병역거부에서 사회운동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화된 주요 사례로, 독일을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회복지제도의 주요 요소로 포함시킨 모델로, 덴마크를 병역거부권의 선구자로 보는 시각도 참조할 만하다. (이상 주요 참고 자료는 The New Conscientious Objection, 찰스 C 모스코스 외 지음, 1993).

4. 길게 검토할 사항들

가. 절대적 병역거부와 선택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적(법률적) 보호는 4가지 범주를 고려해야 한다. 거부행위를 하는 시점이 신분상 민간인이었을 때와 군인이었을 때가 구분될 것이며 거부의 대상이 군복무 전체에 대한 절대적 거부인지, 특정 형태의 복무 또는 특정한 전쟁에의 참여 또는 특정한 무기의 사용에 대한 거부인가를 포함하는 선택적 거부인지 구분될 것이다. 그래서 민간인 절대적 병역거부자, 군인 절대적 병역거부자, 민간인 선택적 병역거부자, 군인 선택적 병역거부자의 범주가 있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체계에서 민간인이 양심과 신념에 따라 살상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률로 보호받을 근거가 충분히 있고 사회적 합의도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만 해도 “집총 거부”와 같은 한국 사회의 편협한 용어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의 행위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집총 거부”라는 말은 상징적 의미를 제외하면 본질을 왜곡하는 면이 크다. 현대 군조직에서 총만 들지 않으면 살상이 피해지겠는가). 그러나 시민 개인의 판단에 따라 언제 어떻게 살상행위에 불참하겠다는 다양한 선택적 병역거부권을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상황의 문제는 병역 거부자가 군인 신분일 경우에 더욱 복잡해진다. 왜곡된 상식으로 보면 일단 군인인 이상 군조직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군조직에도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사병에게 있으며, 이 권리는 사병의 도덕 윤리적 판단에 따라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정신을 담은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전쟁중 민간인 학살의 경우 사병은 비록 상관의 명령일지라도 이를 거부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특히 핵무기와 열화우라늄탄, 대인지뢰, 생화학무기, 집속폭탄 등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반인도주의적 무기로 규정된 무기를 사용하는데, 또는 사용하는 것을 보조하는데 사병이 그 행위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권리의 문제가 있다. 이는 최소한의 이성을 가진 사병이라면 신분을 떠나 당장 눈앞에 닥친 당면의 윤리적 종교적 문제이자 양심 인격상의 절박한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훨씬 장기간의 복잡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아마도 본질적인 긴장은 절대적 거부와 선택적 거부 사이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의 근거는 ‘살상’에 대한 양심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군조직의 ‘살상’ 행위는 군조직 내에서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말은 군조직의 ‘살상’ 행위에 대해 사회가 옳다 그르다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와 별도로 다른 판단을 하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민간인 군인 신분상의 차이를 이유로 권리 보호에 차이를 둘 경우, 앞으로 예상되는 예비군의 군사훈련 거부권, 노동조합의 불법무기 생산 거부권 등과 연관시켜 볼 때 본질적인 구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상컨대 소수 민간인의 절대적 병역거부권에서 다양한 신분/직업에서의 선택적 거부권 보장의 방향으로 서서히 합의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방위세 납부거부

작년: 영국인종차별 핵무기 증대시킨다 → 무지각전

나. 안보 패러다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정치권의 후진성과 사람들의 왜곡된 국가안보관일 것이다. 한국의 국가안보관은 비합리적인 몇가지 신화에 기초해 있는데, 이 허구적 국가안보관을 대체할 합리적인 안보 가치체계가 제시되어 경쟁관계에 돌입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논의나 보장은 보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전개될 듯하다.

한국의 허구적 국가안보관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신화 또는 냉전적 광신에 기초해 있다.

- 국가안보논의는 군사, 안보(자칭) 전문가들의 소관이다. (여기서 전문가는 군을 아는 남성들중의 일부이며, 준전문가들은 군경험을 한 남성 일반이다.)

- 왜냐하면 국가안보 논의는 특별한 (민감한, 예외적인) 논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 북한의 위협을 강조할수록 우리의 안보에 이롭다 (안보태세의 확립!)
- 북한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나 남침의 의지를 갖고 있다. (적화야욕설, 최후도발설)
- 북한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나 군사력을 강화해 왔다. (군사력증강 항상설)
- 국가안보 (또는 무력분쟁) 에서 군사력은 핵심적 중요성을 갖는다.
- 북한의 남침군사력과 한국의 방어군사력은 낱알세기로 비교한다. (탱크, 비행기 숫자 늘음)
- 안보의 위협은 외부에서 온다.
- 한국(+미국)의 군사력이 우월하면 안보에 유리하다. (=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우리의 '방어력'과 무관하다.)
- 약소국의 안보에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 (또는 더 유리하다).
- 미국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혈맹적 지원국가이다.
- 국방 의무는 신성하다.
- 국방은 군조직을 통해서 (또 '정상적인/강인한' 육체를 가진 남성들로) 수행된다.

물론 이런 신화들은 최근 사회운동과 극소수 연구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도전받고 있지만, 이러한 유치한 안보관과 전혀 다른 질의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제시될 경우 더 빠르게 붕괴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양심적인 병역거부권 확립을 위한 사회운동이 할 수 있는 일

* 큰 방향: 병역에 따른 인간 살상의 문제를 "신앙문제에서 인권으로" 보편화.

가. 인권단체의 준비

- 가능한 모든 논쟁구도에 대한 대비
- 피해자 조사, 연계
- 대응방법의 훈련/ 전담자 준비
- 시민, 사회운동 내부의 인식의 증진을 위한 노력 (특히, 군사주의와 남성성)
- 여론화 필진의 준비

(1) 참조 1: 병역거부와 연관된 군사부문에 대한 다양한 거부의 사례

- 무기, 탄약, 무기 보조장비의 제조 생산 판매에 대한 참여 거부
- 군사 목적의 통신, 운송, 건축에 대한 참여 거부
- 무기 장난감의 생산 판매에 대한 참여 거부
- 군사 목적의 연구활동에 대한 거부
-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서 군사분야와 관련된 자료 및 홍보물 부착 거부
- 방위세 납부 거부 (예: 영, 미) 등

(2) 참조 2: 군사활동에 사회적 차원에 대한 홍보 사례

- 무기별 가격 및 파괴력 (예: 전미과학자협회 웹사이트)
- 무기별 살상 효과 및 사례 (예: 대인지뢰, 열화우라늄탄)

- 무기별 군수산업의 로비 비용 대비 이윤율
- 무기판매 로비와 관련된 선진국 업체 명단과 개도국 관료의 부정비리 관계
- 현재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중인 상업용 무기의 실태 조사 (예: Non-lethal weapons 비치명적 무기?)
- 현재 선진국에서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무기의 실태 (예: 화학적 수소폭탄)
- 외국과 한국 아동 교육기관에서의 무기 홍보의 차이 (유치원 및 아동 도서에 게시된 전투기, 군함, 탱크, 전쟁 그림 등의 빈도수 비교)
- 주요 교육자료 및 공공자료에 나타난 전쟁관, 군인관, 군대관, 힘의 논리의 페미니즘적 해부와 드러내기
- 나라별 군사비 지출과 사회복지 수준의 비교
- 군사훈련의 민간손실, 사회적 손실 계산 폭 (예: 농지 파괴, 농산물 파괴, 해안 해저 환경 오염 등)

나. 사회홍보

- 권위있는 홍보/설명 책자의 발간 [살인을 거부할 작은 자유 1, 2, 3]

(징집제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 징집제도가 끼치는 사회 문화적 영향, 인권으로서 병역거부권, 인도주의 철학/신념으로서 병역거부권, 병역거부운동의 역사, 병역거부 선구자들의 주요 수기 발췌, 주요 국가 병역거부권 보장 제도, 병역거부권을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 방향,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가져오는 사회적 효과(젠더 관계, 인도주의, 군의 사회적 지위, 사회복지상의 효과, 남북관계, 평화 문화...), 평화사상/실천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

- 각 종교권에 해당되는 신앙적 관점의 홍보 책자 발간 (특히 교회 및 사찰 청년모임과 주부모임에서 회람될 수 있는 안내소책자의 발간)
- 여성 모임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젠더 관점의 소책자 발간: 군사주의와 남성성 강화 및 그에 대한 시민적 저항에 관한 소책자
- 시민, 사회단체의 주체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군사주의와 남성성에 관한 의식화 책자 발간
- 적절한 시기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여론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개 세미나/토론회 개최

다. 조사

- 여론조사: 예상컨대 최근 징집대상 세대와 그 부모들은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 언론의 적절한 보도와 소개에 발맞춰 당사자층과 그 부모층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만들어질 듯. 여론 조사 이전에 언론을 통해 국내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깊은 인도주의 신념과 그 온기가 수기 등을 통해 사회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할 수도.

-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 평가

라. 피해자 구제, 입법화... ▣